"국힘, 대선후보 논의보다 자성 먼저"

국힘 소속 이수진 도의원, "윤석열 제명하고 당 쇄신해야… 사필귀정의 힘 바탕으로 당 다시 태어나야"

국민의힘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인 이수진 의원이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인 이수진 의원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반한 죄를 '사즉생'의 각오로 되새기고 거듭나야 한다"며 당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민심은 승리했고, 도민들은 깊은 감동과 함께 희망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당은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을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하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한 해당 행위자들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벌백계와 신상필벌이야말로 당을 살리고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당리당략과 권력에 눈이 멀어 양심을 저버린 자들이 지금 대선후보로 나서려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국민의힘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저는 당론에 맞서 옳음을 지키려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 이후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안하무인식의 연속이었고, 결국 파면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지켜질 때 국민이 하나되고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다"며 "도민과 함께 이뤄낸 사필귀정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뒤에야 진정한 용서와 재출발이 가능하다. 지금도 도민들은 공직자의 처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결기를 분명히 했으며,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여러 행보에 대해서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만호 기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지명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국민주권 원리 훼손" 비판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의 지명은 월권, 즉각 철회해야"

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공동대표 김용만)는 8일 성명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헌재 알박기"이자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덕수 총리가 전북 출신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라며,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에 불과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권한을 넘겼다"며, "헌정사상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직접 선출을 받지 않았고, 대통령과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며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원천 무효이며,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해야 하며, 내란동조 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김슬지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농촌 주민 스스로가 자조·자립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생활 밀착형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데에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농촌 공동체의 조직화, 교육·컨설팅, 돌봄·문화 등 서비스 연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협력 촉진, 재능나눔활동 지원,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광역지원기관 지정 등도 포함되었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협약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도 도입됐다.

김슬지 의원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생활서비스가 자리잡고, 전북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에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실태조사 및 정책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및 광역지원기관 설치, 다양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전북 농촌정책의 실행력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북은 최근 농촌뿐만 아니라 전주시까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가 전북 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민주 신영대 의원, 다회헌혈자 건강검진 지원 법안 대표발의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최근, 다회헌혈자 등 헌혈공로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우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나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없는 유일한 생명 나눔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공익적 활동이기에 반복적으로 헌혈을 실천해온 국민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회헌혈자에 한하여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호 기자

국가균형발전 도모·첨단의료산단 지역 확산

민주 윤준병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7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의 오송과 대구·경북권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되어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기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 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전북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지역 유치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규모 의료산업단지도 지정 될 수 있도록 했고, 국토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계화 옛 방조제, 꽃길 조성으로 첫걸음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 출범

8일, 부안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 출범식이 열렸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8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교육기관 등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협력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기념 식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식목 행사는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첫 활동으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는 환경보호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민·학·관 협력 거버넌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5개 기관(업체)에 이어 이달 2일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가 담긴 계화 옛 방조제길이 겹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플로깅, 해양 업사이클링, 나무 지킴이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프로젝트가 펼쳐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를 통해 기후 위기 해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새만금의 개발을 목표로 민·학·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라면서, "새만금을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우리나라 농업생산량 증대와 새만금 간척 사업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계화 옛 방조제에서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 출범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의미가 크다."라면서 "새만금 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 지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라면서 "새만금에 친환경으로 특화된 경관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자치도 출범 2년차 도내 공직자 실행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민간단체 및 14개 시군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북자치도 및 특례에 대한 역량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역량강화 계획은 출범 2년 차를 맞는 전북자치도 공직자들의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4개 시군 공직자 등 '역량강화 교육' △14개 시군 공직자 '성공화 아카데미'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도내 육성 산업에 이차전지 등 포함

김동구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점 육성산업 방향에 따라 지역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산업을 총 10개 분야를 △미래형 자동차산업 △조선·항공산업 △농·건설기계산업 △재생에너지산업 △수소에너지산업 △탄소융복합소재산업 △바이오산업 △디지털·ICT융복합산업 △이차전지 산업 △방위산업 등으로 재정립했다. /이만호 기자

도지사 인증상품, 전북자치도 우수상품으로

김만기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임시회서 원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 발의한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례 조례'가 제41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조례 명칭의 변경이다. 기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및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단순한 인증 개념에서 벗어나 도민과 함께하는 우수상품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에서 사용되던 '도지사인증상품'이라는 용어를 '우수상품'으로 일괄 변경하며,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만호 기자